

『세계시민주의와 자유의 지리학』(2014 출판 예정)

제1부 “보편적 가치”

(데이비드 하비 지음, 최병두 옮김)

이소영*

세계화와 이에 따른 물질적·심리적 경계의 희석은 이제 거부할 수 없는 현상이 되었다. 워터스(Waters, 1995)는 세계화를 ‘정치사회적 제도의 지리적인 제약이 사라지는 현상을 사람들이 인식해 가는 과정’이라고 정의내리고 있다. 제도의 지리적인 제약의 약화는 대규모 인구의 이동을 동반하고 이러한 인구의 이동은 베스트팔렌 체제 이래 이어져온 국가 기반 시민권의 성격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세계 무역의 성장과 세계 시장의 급격한 확장은 이제 세계시민이라는 용어를 더 이상 고대나 계몽주의 시대의 언어로 머물지 않게 만들고 있다.

18세기 계몽주의 시대에 형성된 근대적 의미의 세계시민 개념은 칸트에 이르러 새로운 국제질서를 구상하는 데까지 발전하였다. 칸트는 개별 국가 간 충돌을 해결하고 영구적인 평화를 구축해 나가는 방법으로 인간의 이성에 바탕한 세계시민권 제도를 제안한다. 세계시민권은 세계의 시민들이 어디에나 여행하고 체류할 수 있는 권리, 적대적 대접을 받지 않을 권리, 그리고 지구에 대한 공동의 권리와 책임을 포함하고 있다. 개인과 국가의 평화공존을 지향하는 이러한 칸트의 세계시민권 개념은 과거보다 국경이 낮아진 지구화 시대의 시민권에 대한 논의의 출발점을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세계의 모든 시민들이 제대로 대접 받으면서 공동으로 향유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는 칸트적 세계시민권 개념은 신자유주의를 바탕으로 하는 서구 자본주의의 확장 시대에 시장의 가치를 인간의 권리 또는 인간의 자유

* 대구대, 정치학, soyoung.sylee@gmail.com

라는 보편적 가치로 둔갑시키는 데 일조하고 있다는 비판에 직면한다. 포크(Faulks, 2000, *Citizenship*)가 지적하고 있듯이, 지구화로 인한 무역 및 투자의 확대는 세계의 거의 대부분의 지역을 자본 축적을 통한 이익으로부터 배제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지구화라기보다는 양극화라는 표현이 더 적절한 상황이다. 규제 폐지에 의한 불안정한 금융시장의 성격은 빈곤국의 사회적 불안정성과 빈곤을 심화시켜 시민권 유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보편적 권리와 가치의 공유를 기본 개념으로 하는 세계시민주의는 지구화의 결과로서 세계 시민들에게 나타나는 이러한 차별적 결과를 뒤로 하고 인간의 존엄성, 자유, 평등, 국가권력의 제한, 법치 등과 같은 자유주의적 가치의 지구적 공유를 앞에 내세움으로써 지구화를 통해 이익을 얻는 자유주의 국가들의 전략을 합리화하는 데 이용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파머습격(Palmer raids)을 통해 급진적 이민자와 아나키스트들에 대해 대대적 탄압을 가했던 윌슨 행정부나 이라크를 공격했던 부시 행정부나 모두 자유나 자율과 같은 자유주의 가치를 보편적인 가치로 믿으면서 이를 세계 시민들에게 확산하여야 한다는 목적을 앞세우고 있었다.

번역본 『세계시민주의와 자유의 지리학』으로 곧 출판될 예정인 *Cosmopolitanism and Geographies of Freedom* 제1부에서 데이비드 하비(David Harbey)는 세계시민주의가 가지는 이러한 보편주의가 초래하는 문제점을 매우 자세히 비판하고 있다. 지리학자인 하비가 이 책을 통해 궁극적으로 전달하고자 하는 바는 자본주의의 세계적 확산을 합리화하는 보편주의를 극복하고 해방적이고 세계시민적인 새로운 지적 질서를 구축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지리학의 복원일 것이다. 그러나 정치학 연구자인 필자가 이 책을 접하면서 보다 관심 있게 보고자 한 것은 지리학적 지식을 세계시민주의 프로젝트에 편입시킬 필요성을 주장하기 위해 하비가 보여주고 있는 보편주의적 자유주의와 세계시민주의의 가치에 대한 통렬한 비판이다. 세계화와 더불어 세계 전 지역이 신자유주의의 물결에 휩싸이고 한국사회 또한 신자유주의의 폭격에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이 때 하비가 말하는 “약탈을 통한 축적”을 위해 보편주의적 세계시민주의가 자유주의 국가들에 의해 어떻게 정치적으로 활용되고 있는가는 오

늘날 국제정치학의 관심 영역과 중첩하고 있는 부분이다. 특히, 하비는 이 책에서 전형적인 자유주의 학자들 또는 보수주의 학자들을 대상으로 비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일반적으로 급진적으로 인식하거나 적어도 마르크스주의적 전통으로부터 영향을 받았다고 인식하는 학자들을 대상으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보편주의적 오류에 대해 비판을 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흥미를 더한다. 이러한 흥미와 그 학문적 함의를 독자들과 나누는 것을 목적으로 이 글에서는 보편주의적 지식 질서에 대한 하비의 비판을 소개하고자 한다.

1장에서 하비는 칸트의 인류학과 지리학에 대한 비판으로 논의를 시작한다. 칸트는 세계시민적 윤리를 자연과 인간의 본성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이해함으로써 순수한 추론이나 관념주의와 차별화하고 지리학과 인류학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다. 하지만, 하비는 칸트가 베스트팔렌 체제가 바탕해 온 민족적 차이를 제거한 단일한 세계로서의 세계정부가 아니라 독립적 국민국가들의 연방에 바탕을 둔 연합체적 세계정부 형태를 유도하는 과정에서 인류학과 지리학이 단지 개념적 필요에 의해 채택되었다는 점에 주목하고 칸트를 비판한다. 칸트는 공통혈통에 바탕을 둔 국민국가를 자연과 인간의 본성이 발현된 형태로 보고 이들의 차이를 인정하면서 이 국민국가들이 연합한 형태를 세계정부라고 보았기 때문에 특수성에 대한 강조가 필요했었던 것이지만, 하비는 칸트가 강조한 이 특수성에 대한 이해가 매우 편협된 편견을 동반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이주의 자유와 관련있는 칸트의 세계시민권은 불결한 호텐트트족, 술취한 사모예드족, 비굴하고 도둑질을 일삼는 자바인 등에게는 주어질 수 없다. 성숙한 개인들에게만 주어질 수 있는 권리인 것이다. ‘문명사회’로서의 국민국가는 인정하면서 이와는 다른 민족의 관습과 습성에 대해서는 편견을 가지고 세계시민의 자격을 전적으로 개인의 ‘성숙도’에 좌우되는 것으로 이해한 칸트의 접근법은 오늘날 서구 국가들이 비서구 국가들을 바라보는 시각과 유사성을 띠고 있다 하겠다.

하비에 의하면, 칸트의 지리학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칸트가 지리학을 정의하면서 환경의 역사를 배제하였다는 점이다. 칸트는 공간과 시간을 선형적으로 종합적인 것으로 보고 있지만 실제로 칸트의 세계시민법에 대한 영토적

접근의 틀이 되고 있는 지리학은 공간과 시간을 분리하고 단지 공간적 질서와 구조에 관한 경험적 지식에 머무르고 있다는 것이다. 하비는 지리학을 “공간의 개념을 통해 다른 과학들의 연구 결과를 종합하는 종관적 학문”이라고 정의한 칸트의 정의가 독일 및 미국 지리학의 불행을 만든 씨앗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메이(J. May)의 해석에 의하면, “공간적 질서가 만들어낸 국지적 진리와 법칙들이 공통의 혈통으로 규정되는 국민국가 안에서 시민성이라는 특정한 규칙에 따라 영토적으로 도출된 것”이 세계시민법에 대한 칸트의 지리적, 인류학적 접근의 틀이 된다. 그러나 하비는 국민국가들이 민족성에 따라 구성한 자신들의 독특한 규칙이 있는 세상에서 지구적 거버넌스와 관련한 현안들에 보편적 윤리의 이상이 적용된다면 어떤 일이 발생할 것인지 묻고 있다. 또한 특정 사람들은 미성숙하고 열등하다고 생각되는 세계에서 보편적 윤리를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도 묻고 있다. 보편적 원칙이 서로 다른 지리적 조건들에 걸쳐 보편적 선으로 가장한 채 극심한 차별적 규칙으로 작동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즉, 보편적 원칙들에 기반하는 칸트의 세계시민주의는 편견에 따라 배제하는 수많은 특권들을 허용하고 정당화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지리적 타자들’에 관한 고정관념과 편견은 결국 세계시민주의가 윤리학의 보편성과 인류학 및 지리학의 특수성을 대조적으로 개념화하도록 만드는 요소가 된다.

칸트의 세계시민주의는 문명국가 정부가 정의와 민주주의, 자유와 선에 대한 보편적 원리의 담지자로서 미성숙하고 열등하며 게으르고 불성실한 지리적 타자들에 대해 차별적인 방식으로 대하는 것을 합리화할 수 있다. 미국과 서구사회가 자유시장과 자유무역, 그리고 사적소유권의 지구적 질서 확립을 위해 시도한 이른바 ‘후진적인 국가들에 대한 침략과 파괴’가 자유와 평등, 인권, 정의와 같은 보편적 선의 세계적 전파를 위한 행위로 정당화되는 데 칸트의 세계시민주의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하비의 지적은 매우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지리학이나 인류학적 특수성이 보편적 윤리의 범주를 벗어날 때 그것은 부시가 그랬던 것처럼 ‘악의 축’이 되거나 ‘실패한 국가’ 또는 ‘깡패국가’

가 되고 그러한 압목적 규정하에 세계지도가 만들어진다는 것이다. 이렇게 지리학이나 인류학 지식의 대부분이 정치적 용도로 활용되고 있다는 점은 세계화 시대가 지향하는 세계시민적 거버넌스가 결국은 ‘계몽’의 가면을 쓰고 서구 사회의 제국적 통치를 합리화하기 위한 수단에 머무르고 있다는 우려를 자아낸다.

2장에서는 칸트적 세계시민주의를 탈착근적, 보편적 개인주의에 바탕한 자유주의와 차별화시키고자 한 탈식민주의 학자들의 시도를 논의하고 있다. 자유주의는 “보편적 윤리의 강력한 표현”으로서, “자연적 또는 지리적 차이와 그에 따른 감성적 애착이 어떤 정치적 가치를 가지는 것을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배제의 정치”를 정당화한다. 칸트적 보편주의의 비판을 통해 언급했던 것처럼 이 배제의 정치는 특정 공간 사람들을 악마, 야만인, 미개인으로 간주하거나, 또는 자유주의 체제 내에 포함되기에 충분한 정도의 교육을 받지 못한 미성숙한 사람들로 취급함으로써 제국주의적 지배의 조건을 뒷받침한다.

탈식민주의 학자들은 이러한 자유주의적 보편주의가 만들어내는 배제의 정치를 통렬히 비판하면서 장소성, 국지성 및 지리적 유의성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차크라바르티(D. Chakrabarty)나 메타(U. Mehta)와 같은 탈식민주의 학자들은 칸트적 의미의 세계시민주의라는 추상화를 따르고 있으면서도 자유주의적 보편성에는 반대함으로써 자유주의와 세계시민주의를 분리하고 있다. 이들은 단선적이고 보편적인 역사적 진보에 반대하면서 진보는 비연속적이고 불균등하게 진행될 수 있음을 주장한다. 특히, 인류학적, 지리학적 지식이 자유주의 이론 내에서 제국주의적 통치를 정당화하는 데 필수적인 역할을 담당해 왔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는 메타는 자유주의자들이 영토가 상징적 표현일 뿐 아니라 독특한 방식의 삶이 가능하기 위한 구체적 조건이라는 점을 이해하지 못했다고 비판하고 있다.

메타에 따르면, 인류학 및 지리학은 이질적이면서도 관련이 되어 있는 공간적 동시성에 대한 해석학이 되어야 한다. 메타는 국지성을 무비판적으로 인정하는 경우 배타적 공동체주의나 파시즘적 폭력으로 빠질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보편성을 인정한다. 국지성과 장소성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도 보편적

인 것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은 차크라바르티에게도 나타나고 있다. 메타가 보편성을 받아들이기 위해 끌어들이고 있는 에드먼드 버크(E. Burke)의 경우도 인간의 경험을 형성하는 다양한 생활 형태들을 이해함으로써 세계시민주의가 현실화될 수 있음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하비는 탈식민주의 학자들이 시도한 국지성과 보편성의 결합 노력의 결실들을 인정하면서도 한편에서는 이들이 보편성의 잠재적 함정들(예를 들어, 인종주의로의 회귀와 같은)을 무시함으로써 적절한 논의를 전개하지 못하고 있음을 비판한다. 특히, 하비는 많은 탈식민주의 학자들이 장소성과 국지성의 중요성을 강조함에 있어서 하이데거적 형이상학에 바탕하여 파편화된 시간성을 환기시키고자 하지만 결국은 모더니즘적 보편성의 이해 안에 있을 뿐이라는 점을 지적한다. 이러한 주장을 위해 하비가 들고 있는 인도의 예는 매우 설명력이 뛰어나 보인다. 영국이 만든 인도 지도는 영토의 특성을 수리적 공간으로 변환시켜 획일적인 유클리드적 공간의 격자 내 위치를 제외하고는 역사, 기억, 또는 어떠한 정체성의 표지도 가지지 않는 것으로 가정한 것이었다. 그런데 인도의 민족주의자들은 이러한 지도를 버리는 대신, 신화 등을 통해 그 지도에 의미를 다시 채우는 방법으로 공간과 장소 및 지리에 관한 인도의 의미를 시간과 역사에 관한 추상적이고 모더니즘적인 이해와 결합시킨다는 것이다. 이 인도의 예를 통해 하비는 탈식민주의 이론이 “엄청난 양의 하이데거적 신화학으로 자신의 이론을 채우기 위해 온갖 노력을 다하지만, 이 이론은 영국의 제국적 통치에 의해 전해져 내려오는 인도의 지도학적 이미지 내에 비밀스럽게 갇힌 채 안심하고자 하는 위험을 안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하비는 이를 통해, 버크적 또는 하이데거적 정식화에 의지하여 잘못된 방향을 접합시킬 것이 아니라 “새로운 우리의 개념적 지도학을 구축하고 우리의 실제 지리학을 만들어낼” 필요가 있음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3장에서 그려지고 있는 신자유주의적 세계는 보편적 가치의 이름 하에 전 세계적으로 사회적 불평등의 심화를 가속화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과 올바른 지리학의 필요성을 더 크게 제기하고 있다. 신자유주의의 가장 큰 문제점은 사적 소유권과 시장제도를 다양한 지리학적, 생태학적, 인류학적

상황들에 일괄적으로 부여한 것이었다. 개인화된 사적소유가 보편적 가치로 인식되는 가운데 개인주의적 체제와 병존하기 어려운 사회적 연대에 대해서는 끊임없는 공격을 수반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신자유주의는 노동계급 공동체를 비롯한 광범위한 사회적 붕괴를 가지고 왔다.

하비는 신자유주의가 확장되어감에 따라 지구화라고 불리는 추상적인 개념을 통해 세계는 개념적으로 평탄하게 된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하비에 따르면, 지구화는 권력관계가 내포되어 있는 자본주의나 제국주의를 은폐하는 언어적 속임수에 지나지 않는다. 지구화라는 명목 하에 이루어지고 있는 신자유주의 정책의 지리적 확산이 매우 불균등하게 진행되면서 소득과 부의 엄청난 격차가 초래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한국이나 멕시코와 같이 신자유주의의 확산에 의해 금융 붕괴와 사회적 황폐화, 그리고 정치적 위기를 경험한 국가들에서는 국내 계급 구조의 대대적인 재편을 경험하였다. 신자유주의는 사회적 성장을 유도하지 못하고 결국 부와 소득이 인구의 다수로부터 상위계급으로 재분배되는 결과를 낳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부의 이동을 하비는 “탈취에 의한 축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전 지구적인 민영화의 물결이 국가연금, 복지, 국민건강관리 등 수년 간 투쟁을 통해 획득한 공적 소유권의 영역까지도 사적영역으로 전환시키면서 모든 자산이 공적 영역에서 사적 영역으로 이전되고 있으며, 엘리트들은 이를 더욱 쉽게 장악하게 되었다.

하비는 부의 불균형적 분배를 동반하는 신자유주의적 지구화가 스스로를 합리화하는 이데올로기적, 정치적 장치로서 ‘거버넌스’와 ‘권리의 보편주의(인권)’ 개념을 어떻게 이용하는지에 대해 흥미로운 설명을 제공하고 있다. 행정의 효율성과 합리성의 이상에 근거를 두어 정치적으로 중립적인 공공정책들을 고안해 내는 것을 의미하는 거버넌스를 하비는 “현혹시키기 위한 위장”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하비는 옹(I. Ong)의 주장을 빌어, 민관 파트너십 개념에 바탕한 거버넌스를 “조직된 정치경제적 권력의 네트워크화되고 탈중심화된 체제를 통해 부와 소득이 부유한 자들에게 재분배되도록 하는 계급적 및 사회적 관계를 효과적으로 은폐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편향된 계급 프로젝트를 마치 능률적인 거버넌스와 관련된 것처럼 개념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같은 맥락에서, 하비는 인권에 대한 강조와 인권운동을 “개인을 정치경제적 생활의 근본으로 간주하는 신자유주의적 이데올로기가 시발시킨 광범위한 개인적 권리 운동”으로 표현한다. 하비에 의하면, 이러한 운동은 사회적 연대와 민주적 구조의 창출보다는 개인적 권리에 초점을 두면서, 자신들의 입장을 신자유주의적 용어들로 표명하는 특징을 지닌다. 이는 이 운동이 법적 장치 내에서 또는 비정부기구와 같은 시민사회 조직 구성을 통해 이루어져야 함을 의미한다. 하비는 비정부기구들을 때때로 엘리트주의적이고 불명확하며, “거버넌스 구조 내로 통합을 추구하고 그들의 고객을 대표하기보다는 그들을 통제하는” 역할을 하기도 하는 것으로 묘사한다. 권리의 주장에 전제된 보편성과 보편적 법칙이 정치경제적 생활의 국지적 특이성 및 일상적 실천과 부합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이들 사회운동단체들은 파편적이고 개별적으로 발생하는 다양한 탈취에 통합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인권, 존엄, 지속가능한 생태적 실천, 환경권 등의 보편주의적 수사를 사용하게 되며 이를 통해 신자유주의적 틀 내로 흡수된다. 동시에, 하비는 인권과 같은 보편적 권리에 기반을 둔 박애주의가 “개도국들의 내적 문제들에 대한 서구적 개입을 정당화하기 위한 명분의 확대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찬들러(D. Chandler)의 말에도 동의하고 있다.

이러한 입장에 대해 제기할 수 있는 하나의 질문은 “그렇다면 보편적 권리와 법에 대한 호소는 모두 옳지 않은 것이며 회피하여야 하는 것인가”라는 것일 것이다.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의 과정에 하비의 고민과 업적이 있는 듯하다. 하비는 보편적 주장 이면에 놓여 있는 지리학적, 인류학적, 생태학적 차이를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에 관심을 가진다. 그 설명은 탈식민주의 학자들이 버크와 하이데거에 호소하는 식의 방법도 아니고, 수많은 공간적 배제를 창출한 칸트적인 설명도 뛰어넘어야 하는 것이다. 하비는 영토적으로 규정된 절대적 주권과 시민성이 지구화라는 명목 하에 그 경계를 허물고 약화되는 듯이 보이지만 사실상 세계는 무정부적 시장의 힘과 자연자원의 고갈이 주권 국가들을 더욱 위험한 라이벌 관계로 끌고 가는 국면에 처해 있음을 상기시킨다.

하비는 4장에서 이러한 위협에 대한 하나의 대응방법으로 부상한 새로운 세계시민주의의 가능성을 집중 분석한다. 국가의 주권적 권력 또는 국민과 국가

의 일치성에 대한 도전은 전 지구적인 문제들에 접근하는 한 방법으로서 세계 시민주의의 적극적 복원을 시도하게 만들었다. 그러나 하비가 지적하고 있듯이, 세계시민주의는 너무 많은 관점들에 따라 재구성되면서 오히려 개념적 혼란을 가져 왔다. 뿐만 아니라, 세계시민주의는 지구화와 혼돈되면서 보편주의적 자유주의의 부활과 그 길을 함께 가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기도 하다. 이 때문에, 하비는 세계시민주의가 타자성에 대해 어떻게 주목할 것인가, 문화적 차이와 지리적 특이성을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 그리고 국민과 국가가 세계시민주의와 철저히 대립적인가? 라는 질문을 던지게 된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하비가 보기에 세계시민주의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인권과 관련하여 언급했듯이 급진적 비판처럼 보이는 것이 오히려 은밀하게 신자유주의화와 계급 지배를 더욱 강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하비에 의하면, 특히 울리히 벡(U. Beck)에게서 이러한 딜레마가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벡은 국민주의와 세계시민주의를 상호보완적인 개념으로 보고, “세계시민화는 보편적인 것과 특수한 것, 유사한 것과 상이한 것, 지구적인 것과 지방적인 것이 상호 연계되고 상호침투적인 원칙들로 간주되는 비선형적 변증법적 과정”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하비는 벡의 이러한 변증법적 정형화의 모호함을 지적하면서 실제로 벡이 그의 세계시민주의를 뒷받침하는 원칙으로서 개인적 인권의 보편주의에 의존하고 있음을 비판한다. 벡은 예상되는 위협에 대한 예방적 전쟁이나 국민의 인권을 오용한 지도자들에 대해 치안활동을 할 수 있는 민주적 정부의 권리를 인정하는 방식으로 소유적 개인주의의 정치경제적 이데올로기를 인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벡은 진정한 세계시민주의는 신자유주의와 지구화와는 다르지만 이들로부터 도출된다는 설명을 통하여 이러한 문제에 답하고 있다. 하지만, 하비는 신자유주의적 지구화와 제국주의의 헤게모니 이론과 실천이 어떻게 세계시민주의적 실천들과 상호교차하는가에 대한 비판적 고찰이 결여되어 있다고 비판한다.

세계시민적 형태의 거버넌스에 대한 관심을 주장한 헬드(D. Held) 또한 마찬가지로 문제를 가지고 있다. 헬드에 의하면, 세계시민주의는 보편적 원칙에 바탕하지만 동시에 항상 상황적 논의들이 유발되는데 이들 특정 상황들에게

는 해석학적 복잡성이 존재한다. 이 복잡성에 대한 해결방법으로 헬드는 국지적, 지역적 귀속을 반영한 ‘층화된 세계시민주의’를 제시한다. 그러나 하비는 헬드가 이 층화에 대한 구체적 설명과 함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다원성을 모든 사람들이 ‘합리적으로 동의할 수 있는 불가침적인 것’으로 환원시킴으로써 ‘성숙한 개인’에 호소한 칸트를 넘어서지 못하고 있으며, 따라서 엘리트주의적, 즉, 계급적 성격을 분명히 드러내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이러한 논의들을 통해 하비는 새로운 세계시민주의가 “적절한 민주주의 모형들이 선도적 국민국가 틀 내에서 이미 구축되었으며 따라서 중요한 문제는 이를 다른 지역들로 확대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는 것”이라는 가정을 하고 있음을 통렬히 비판한다. 같은 맥락에서, “시간으로부터 공간을 분리시킨 칸트의 사고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으며, 공간에 대한 고민이 없이 단지 시간적 차원의 문제로만 인식하고 있다”는 하비의 벡에 대한 비판이 이해 될 수 있다.

반면, 사센(S. Sassen)은 다양하게 전문화된 네트워크와 영역들이 국경을 넘어 새로운 공간성과 시간성을 만들어내고 있는 시점에 있어 국민국가의 역할을 재해석하고자 하였다. 지구적 교환과 거버넌스에 다양한 층위들이 등장하면서 한정된 공동체 내에서 행사되었던 시민성은 이제 다중적 입지를 가지게 되었다.

사실상 세계시민주의의 핵심은 우리가 시민성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에 있다 할 수 있다. 여러 새로운 세계시민주의 학자들은 헬드와 같이 시민성 권리의 다층화된 구조를 말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헬드와 함께 벤하비브(S. Benhabib)는 다층화된 거버넌스를 통해 “지구적 포부와 국지적 자기결정 간 대립을 완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한다. 이러한 주장은 문화와 집단의 특이성을 강조하는 공동체주의자들의 비판을 받지만, 하비는 인간적 권리나 의무, 책임이 필연적으로 국민국가의 경계를 넘어 확장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벡, 헬드, 벤하비브 등 세계시민주의자들과 생각을 같이 한다. 그러나 벡이나 헬드에서 보이는 협의적이고 개인주의적이며 신자유주의적 윤리에 가까운 권리 개념은 하비에게 있어 비판의 대상이다.

이와 관련하여 하비의 관심은 이러한 협의의 권리 개념이 아닌 정의로운 사회질서에 적합한 권리를 개념화하는 것이다. 하비는 이러한 새로운 권리 개념을 도출하는 데 있어 누스바움(M. Nussbaum)의 영향력을 크게 받은 듯하다. 누스바움은 권리를 개념화하기 위해 모든 사람들이 열망할 것으로 예상되는 ‘핵심적 인간 잠재능력’을 제시한다. 누스바움에 의하면, 생명, 신체의 건강, 신체의 고결성, 사상의 자유, 정서 등등 10여 가지의 핵심 인간 잠재능력이 인간의 권리에 관한 이해를 향상시킬 수 있다. 이 잠재능력들은 신자유주의가 전형적으로 권하는 권리와는 완전히 다르며, 따라서 백이나 헬드와는 다른 세계시민적 공간을 구성할 수 있게 한다. 그러나 하비는 누스바움 또한 어떻게 사회화 과정에서 격리의 지리적 구조를 통해 차이를 지속시키는 사회/공간적 구조물에서 차이들이 구체화되는지를 고려하지 않았음을 비판한다. 즉, 구체적 수단을 설정함에 있어 누스바움은 문제를 노출하고 있는 것이다. 하비는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비판하고 있다.

우리는 인간의 잠재능력들을 실현하기 위하여 어떤 영토적/지리적 형태의 조직을 필요로 하는데, 그녀의 보편적이고 탈착근적인 추상화가 근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자신이 앞서 원칙적으로 세계시민주의라는 이름으로 그 권력을 비난했던 국민국가를 통하는 것이라고 그녀는 말하는 것처럼 보인다.

결국 누스바움은 반국민주의와 잠재능력들이 실현될 우선적 제도로써 국민국가를 설정함으로써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것이다. 하비는 이러한 누스바움의 딜레마를 국가, 기업, 시장에 관련한 자유주의 이론에 대한 그녀의 무비판적인 애착에서 오는 것으로 평가한다.

그렇다면, 신자유주의적 세계시민주의와는 다른 진정한 세계시민주의는 어떠한 방식으로 정식화될 수 있는가? 하비는 세계시민주의가 도출될 수 있는 3가지 방법을 지적하고 있는데, 그것은 철학적 성찰을 통해 도출하는 방법, 실천적 요구와 기본적 인간 필요에 관한 평가를 통해 도출하는 방법, 그리고 사회운동의 고취로부터 도출하는 방법 등이다. 이 중에서 하비는 특히 사회운동

의 사고와 실천의 다양성을 분석에 통합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드 소사 산토스(De Sousa Santos)가 정의한 ‘기층적 세계시민주의’의 필요성을 지적하는 하비는 개인적 자율성의 자유주의적 이상을 능가하는 사회정의, 평등, 권리의 개념화를 위해 비판적 관점이 필요함을 역설한다. 사회운동을 통해 특수주의적 국지적 문제의 해결을 지향하는 동안에 각 지방과 이들의 네트워크들에서 지구적 범위의 제도 만들기 작업이 일어나고 결국 국내적 역할에 한정된 행위자들이 그들의 공동체 내에서 자신의 작업과 역할을 버리지 않으면서 지구적 네트워크를 가진 행위자로 정치적 전환을 이루게 된다고 보고 있다. 즉, 세계를 변화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 않았던 국지화된 사회운동이 결국 세계시민주의의 시발점이 되는 것이다.

사회운동의 지리적 확산 및 국지화된 특이성들과 지구적 조건들과의 변증법적 연계성 유지를 바탕으로 하는 기층적 세계시민주의의는 “공간과 장소 구축의 지리적 원칙들이 세계시민주의 프로젝트의 전개와 어떻게 관련되는가”에 대한 깊은 이해를 필요로 한다. 하비의 작업은 이러한 기층적 세계시민주의의 실현을 위해 어떤 종류의 지리학적(혹은 인류학적, 생태학적) 지식이 세계시민적 교육에 적합한가라는 질문에 대해 답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 책의 1부에 해당하는 “보편주의”의 마지막 장은 그간 지리학이 보여 온 추상적이고 형이상학적인 개념화를 비판하고 지리학이 자유주의의 확장의 정치적 수단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비판을 가하고 있다.

하비는 자유주의, 신자유주의, 세계시민주의와 같은 보편적 사유형태들이 차이를 연구대상으로 설정하는 지리학, 인류학, 사회학과 같은 연구 영역들에서도 규범을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 특히 지리학이나 인류학은 특정 국가들을 악마화하고 지구적 차원의 지정학적 배열들을 선과 악, 성숙과 미성숙, 야만과 문명 등으로 지도화하는 담론을 형성하는 데 큰 역할을 하면서 정치적 과정 자체에 통합되어 왔다는 지적은 매우 정확해 보인다. 부시 대통령의 악의 축 규정이나 이라크 침탈과 같이 자유주의의 탈을 쓰고 타산적인 상업적 이해관계를 은폐시키는 과정에는 영락없이 지리학적 지식이 이용되어 왔다.

하비에 의하면, 이러한 지리학(또는 인류학, 생태학)적 지식의 오용은 세계적인 지리학적 세부사항들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지 않은 채 차이를 과도하게 단순화함으로써 초래된다. 이러한 단순화를 통해 지구적 논제들은 실제로 그것이 다루는 문제들과는 무관한 채 진행되며, 결국은 효과적으로 재생산되는 사회적 권력 관계를 유지하고자 하는 핵심 목표를 달성하게 된다는 것이다. 여기서 지리학적, 인류학적 지식은 사실상 아무런 실질적 역할을 하지 못한다고 하겠다. 하비는 지리학적 및 인류학적 조건들이 기껏해야 특정 장소와 시간에서 이런저런 프로젝트의 특정한 실패를 설명하는 데 도입될 뿐이라는 점을 지적한다. 즉, 인류학 및 지리학은 보편적 입장을 장려하기 위해 기회주의적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어떤 일이 특정한 인류학적 및 지리학적 조건들 때문에 작동한다면, 이는 보편적 이론의 승리라고 주장된다. 반면, 이것이 실패한다면, 이는 바로 그와 같은 특정한 인류학적 및 지리학적 조건들에 의존하여 설명해 버린다.

한편, 공간성을 강조하는 일련의 학자들에 대해서도 하비는 “보편성을 공격하기 위해 공간성을 전략적으로 이용”하지만 지리학 또는 인류학에 대한 구체적인 그림을 갖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코놀리(W. Connolly)는 민주적 에너지와 정체성을 배분할 수 있는 세계시민적이고 다차원적인 민주주의를 얘기하지만 “민주적 에너지의 다중적인 공간화”를 규정함에 있어 지리학적, 인류학적 지식을 언급하지 않고 있으며, 칸트의 세계시민주의를 국민국가 체계보다 훨씬 더 복잡한 인류학적 및 지리학적 차이들과 결합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피로(M. Shapiro) 또한 지리학과 인류학을 통한 탐구는 하지 않음으로써 “공간과 담론의 상호작용으로부터 발생하는 개연성”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반면, 데시핀드(S. Deshpande)는 지구화, 인도적 사고의 개념화, 그리고 독특한 정체성과 의미의 장소로서 힌두의식이 구축되는 관계를 연구하면서 이 관계들이 역사학뿐 아니라 지리학과 밀접하게 얽혀있는 것으로 이해한다. 하비는 “자명한 상식의 지위를 획득한 진리들을 규

정하는 것은 거리나 주거지에서의 세속적이고 일상적이며 국지적인 경험의 진부성”이라는 데시펀드의 지적을 강하게 지지한다. 그러나 데시펀드가 결국 푸코의 헤테로토피아 개념을 이용하여 다른 장소성을 설명하려고 하자 “So what?”이라고 물으면서, 다시 한번 “현실의 지리와 공간성의 복잡성을 다룰 수 있는 더 좋은 이론적 방법은 없는가?”라고 묻고 있다.

이론적 방법론을 탐구하는 과정에서 세계시민주의의 보편성에 반대하는 공동체주의자들의 주장 또한 하비의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하비에 의하면, 공동체주의자들은 상이한 공간과 시간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사회 생태적 과정들이 어떻게 상호교차에 의해 관계적으로 구축되는가를 말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비판은 특히 세계시민주의적 사유방식을 추구하는 여러 학자들에 대해 공통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비판이다. 공동체주의자들이 문화를 일련의 폐쇄된 상지들로 다루는 것에 반대하는 클리포드(J. Clifford)는 보편적 세계시민주의와는 다른 “엇물린 세계시민주의자들”이라는 용어를 제안하면서 “국지적으로 의미 있고 관계적인 미래의 모색”을 이야기한다. 애피아(A. Appiah) 또한 “착근된 세계시민주의” 개념을 통해 국지성에 뿌리를 두고 있으면서 동시에 차이의 조정을 통한 지구적 세계시민주의를 제안하고 있다. 그러나 애피아는 이 차이의 조정에 있어 (칸트식의) 서로를 이해하는 성숙한 개인을 전제함으로써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가 전형적으로 조장한 정치경제적 불평등을 무시하고 결국 핵심문제를 다루는 데는 실패한 것으로 하비는 평가한다.

클리포드나 애피아와 같이 국지성에 대한 적절한 논의를 끌어내고 있는 여러 학자들에 대하여 하비가 제기하고 있는 근본적인 비판은 이들이 국지성을 다룸에 있어 매우 하이데거적이라는 데 있다. 하비의 관점에서 하이데거는 장소가 모든 것에 우선하며 존재의 진리를 위한 현장이라고 말하면서도 사실상 현실의 장소들에 대해서는 전혀 서술하지 않음으로써 장소를 추상화된 형이상학적 개념으로 만들어 버렸다. 이 때문에 하비는 “실재 장소의 진정한 성격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를 묻고 있는 것이다. 하비에 따르면, 장소성에 대한 하이데거적 추상성은 정치적으로 규정된 “특정한 악”에 대해서도 형이상학적 근원을 취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있다. 칸트적인 공간적 배제뿐 아니라 하이데

거적 추상화 과정을 통해 세계는 대칭적으로 묘사되고 동티모르, 르완다, 브룬디, 유고슬라비아, 중동 등에서 우리는 “악의 진부함”을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는 리비아에 대한 나토의 폭격은 칸트적 윤리의 이름으로 특정한 지리적 악을 제거하기 위한 위대한 노력으로 정당화된다.

하비는 결론적으로, 장소에 관해 실제로 아무런 서술을 하지 않았음에도 장소에 관한 탁월한 이론가로 받아들여지는 하이데거나, 또 지리학적 서술에 있어 지리학적 인종주의와 인종적 편견을 보여주는 칸트를 넘어서는 지리학의 정립을 요구한다. 신자유주의 세계의 주요 제도들이 지리학 및 인류학적 조건들 밖에서 작동할 수 있는 것처럼 간주하지만, 실제로는 지리학과 인류학이 사유와 행동, 존재와 생성의 가능성의 조건들을 가정하지 않고는 작동할 수 없다는 하비의 주장은 매우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하비는 이 책의 제2부 “지리학적 지식”에서 이러한 가능성의 조건들이 실제 어떻게 구성되는가에 대한 논의를 전개하고 있다.

하비는 칸트의 지리학적/인류학적 입장에서 출발하면서도 동시에 칸트의 공간적 배제를 통렬히 비난하고, 많은 탈식민주의 학자들이나 마르크스적 학문적 전통을 가진 학자들에게 그 파편성 및 신화의 개념으로 큰 영향을 준 하이데거의 추상성에 강하게 문제를 제기하면서 국지성 및 공간성, 지역성을 강조하는 연구들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하비는 국지성을 강조하지만 공동체주의자들처럼 폐쇄적, 절대적 지역성을 지지하지 않고, 동시에 세계시민주의의 기본적인 개념에 일부 동의하지만, 세계시민적 도덕성으로의 복귀에 대한 믿음도 없으며, 세계시민주의가 동반하는 보편주의와 제국주의적 성격에 강하게 반대한다. 하비가 검토하고 있는 많은 학자들이 이러한 두 가지 대립되는 개념들의 변증법적 연계를 시도했지만 이들 모두는 이러한 변증법적 연계와 정형화에 성공하지 못했다고 하비는 비판하고 있다.

그렇다면 과연 하비는 어떻게 국지성과 보편성을 변증법적으로 통합한 세계시민적 개념을 구축하고 어떻게 이 새로운 세계시민적 교육을 담당할 지리학적 지식을 재정식화할 수 있을까? 수많은 학문적 시도가 성공하지 못했다면, 하비의 지리학적 지식의 재정식화는 얼마만큼의 가능성과 어려움을 담지하고

있을 것인가? 이 책의 제2부에서는 이 새로운 지적 질서를 구축해 가는 데 있어서 하비가 어떻게 기여하고 있는지를 독자들이 평가할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물밑듯이 밀려드는 신자유주의의 물결과 그 결과로서 초래되고 있는 극단적인 불평등, 그리고 오히려 이러한 부정적 요인을 은폐하는 요인이 되고 있는 여러 가지 보편주의적 사회운동들의 뒤섞임 속에서 지리학적(또는 인류학적) 지식의 회복을 통한 새로운 세계시민적 개념의 성립은 신자유주의 시대가 가지고 온 파괴와 손실을 극복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학문적 실천일 것이다.